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16일, 김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4.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9.) 상정, 축조심사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5.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5.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현 의원)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3년 (구)방송통신위원회와 (구)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될 당시 통신 사후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규제 및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분할되었으나, 통신 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 대다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편입되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 후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장 삭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복우)

-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과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2개 기관·협회를 통폐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프라와 인력 등의 경상비 감축,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 및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업무를 이관받은 방미통위의 업무 추진동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가 타당함.

- 다만, 진흥원 설립 근거 및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방송통신발

전 기본법」에서는 설립위원회의 운영 방식, 직원의 고용 승계 방식, 민간 협회·단체의 진흥원으로서의 이관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역할을 통합해 수행할 기관이 필요함.
- 이질적인 두 기관의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지, 통폐합을 통한 효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진흥원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통합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나, 방송 규제와 진흥, 방송의 자율과 독립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